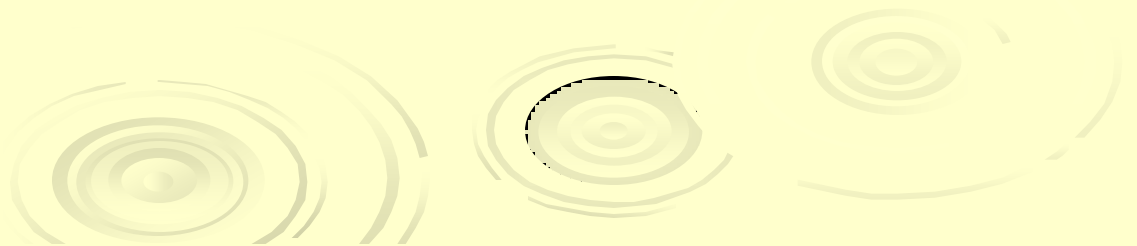


학자의 공적 활동에 관한 윤리 코드

- 학자의 공적활동은 각종 공적 위원회에서 자문, 심의 및 의사결정, 그리고 법정 등에서 전문가 증언활동 등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서, 학자의 공적 활동은 사회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소극적인 의미에서 공적 활동으로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공익적 활동을 장려하는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그리고, 윤리 코드 제정에 더불어서 관련되는 사회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노력한다.
- 보완조치 : 관련된 사회시스템 개선에 대한 제안
 1. 연구용역 표준약관 제정
 2. 연구비 지원 제도 개선
 3. 허위검증시스템 (팩트 체크) : Naming and shaming → 사회적 인정시스템의 활성화
 4. ...
- 부록 (참고자료)
 - <참고 1> “학자의 공적 활동에 관한 윤리코드” 제정추진 취지설명
 - <참고 2> 윤리코드 (AAUP, MBA oath)
 - <참고 3> 대학과 학자의 integrity (양채열, 2016.9.7)

➤ 학자로서의 공적 활동이 우리 사회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자각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모든 공적 활동에서 허위를 배척하고 진리를 추구한다.
-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추구한다.
- 연구 수행이나 결과의 발표 등에서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도록 하고, 또한 공익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여 학계에서 학문적 견해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 학문과 탐구의 자유를 위한 사회적 조건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 우리 모두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조건을 탐구하고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다.



<보완조치> 사회시스템적 개선 사항

1. 연구용역 표준약관 제정
2.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학자의 독립성 강화)
3. 대학의 재정독립성 증진
4. 정부부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거버넌스
5. 행동경제학적 부정행위 감소책 도입
6. 정보전달 위한 공적 교류 활성화
7. 허위 (자동) 파악될 정보 시스템
8. 부패에 대한 감시견제 시스템
9. 투명/책임행정 확립: **CSS** 방식 도입
10. 사회적 인정시스템의 활성화
11. 개인 권익 보호 강화
12. 윤리 강화

[➡ “거부”가 유인합치적이 되어야! (Credible Threat₃)

* 연구용역 표준약관 제정(학자의 Integrity 확보)

- 한국 사회 “부패의 도미노”에서 넘어지지 않을 고정점이 있어야 함.
 - 대부분의 국가정책이 학자가 포함된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는 진행이 불가능할.
- 사업타당성 연구 수행한 연구자에 대한 (장기적인) 보상. 처벌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실명제를 개선하고 연구/연구자의 독립성/책임성을 강화.
- 연구비 지원 사실 공표하여 이해상충 문제 방지
 - 미국경제학회 정보공개정책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Disclosure Policy**)
 - http://www.aeaweb.org/aea_journals/AEA_Disclosure_Policy.pdf
- 연구용역 표준약관 마련: 연구의 독립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 기업 발주 연구 : 사업비밀, 지적재산권 문제로 비밀유지조항 포함.
 - 정부 발주 연구: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발주처 의도에 어긋나는 연구 결과의 사장될 가능성
 - 3 입장 [발주처(관료?), 연구자, 국민(납세자)]이 상충될 경우 판단의 주체?
 - 세금으로 추진된 연구/용역은 발주자(관료) 자의로 비공개 할 수 없도록 함.
 - 한국연구재단/학회연합회 수준에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할 표준 연구 약관 마련 필요.
 - ‘과업지시서’ → ‘학자 자문 요청서’: 발주자(관료)가 갑, 학자가 을인 상황은 개선 필요
- Protect the Integrity of Research. “ It is unhealthy for universities to have their integrity questioned repeatedly by reports of **excessive secrecy, conflicts of interest, and corporate efforts to manipulate and suppress research.** Surely the time is ripe to set appropriate limits and see to it that they are vigorously enforced.”

[Bok, Derek, 2003, Universities in the market place: The commerci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학자의 독립성 강화)

- 학자 연구비와 NGO 국고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 외부효과가 있는 분야에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 관리행정의 비효율성과 관료 재량권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필요
 - 표적수사 문제. 국회에서 학자에게 연구비 정산서류를 제출요구한 사례 등
- “연구자가 허위정산문제 등으로 권력에 대하여 약점을 갖게 되면 독립적인 또는 비판적인 연구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힘들 것이다. 우리 사회에 “겉면 걸린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 말을 생각해볼 때 특히 더 그럴 것이다. 따라서 허위정산의 멍에가 치워지면 보다 독립적 비판적인 연구들이 가능할 것이다. [양채열, 조담, 2006]
- “부정부패 추방 시민연합”이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변칙 사용하여 국고 보조금 환수조치를 당한 사건 (한겨레 1999.11.15)
- “(1) 정부(관료)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미끼로 사용하거나 국고보조금 지급 후 그 사후관리로 위협함으로써 NGO를 통제할 가능성과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과 (2) NGO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는 방안의 두 가지 문제를 탐구... NGO의 독립성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며 NGO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 보조금 지급한 후에, 정부에 의한 회계감사 실시하지 않는 방안이다.” (양채열, 박치성, 2010)
- 투입 관리(산업사회) → 성과관리(지식정보사회)
 -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산업사회와는 달리 투입(노동과정)의 관찰가능성 낮음.

➤ 개인 권익 보호 강화

- 불이익이 두려워 부당한 권력에 저항 못 하지 않도록 기본권 보장
- The primary goal of any anti-corruption programme must be **enabling those who suffer from the problem to oppose it in ways that cannot be ignored.**
... anti-corruption measures that seem most likely to strengthen citizens' ability to advocate and defend their own best interests. (Michael Johnston, Corruption and Reform: One Size Does Not Fit All, -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Summer Academy. Publication 2012)
- 국세청 통제 필요: 검찰개혁과 유사하게 재량권(D)을 줄이고, 책임성(A)을 높이는 조치
- →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권력의 자의성 배제 방안 도입 (fraud detection system + 추첨)
- “후진국 스타일의 권력형 갈취가 벌어지는 한국적 현실이 참담하다. ... 허가·승인이나 금융·공정거래 규제 같은 현안을 솔하게 갖고 있다. ... 정권 앞에서 벌벌 기어야 하는 대한민국 기업 처지가 불쌍하다. ... 기업이 "노(No)"라고 할 수 있어야 정경 유착이 사라질 수 있다. (조선 2016.11.04, 기업은 100% 피해자인가?)
-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57조에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하고 이 같은 복종 거부로 인해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공무원법’ 논란 매경 2017-01-22)
- 2014년 7월 물러난 유 전 장관은 문체부 1급 실·국장에 대한 청와대의 강압 인사, 블랙리스트의 실체 등을 잇달아 폭로했다. 그는 “정치집단은 항상 공무원을 흔들려고 하지만 단언컨대 **90% 이상의 공무원은 양심적**”이라며 “**이들이 양심적으로 일해도 피해를 보지 않는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자를 백안시하지 않는 풍토와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경 2017-01-08)

➤ Naming and shaming (-- 시장규율)

- 사회적 인정시스템의 활성화
- 비공식적 사회 제도 규범 -- 언론, 사회단체, SNS 등에서의 인정(칭찬)과 비난
- 공식적 형법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 필요, 너무나 경직적
- “대학의 규범 형성 기능을 강화/활용, 동문 네트워크를 윤리성 강화 계기로.

➤ * 허위 (자동) 파악될 정보 시스템

- 예측치와 실제치가 비교되어, 책임규명 가능한 시스템 (DB)
-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에 사용된 예측치 - 추후 실제치와 대조
- 자료 공개의 중요성 (data to the people) (장애: 관료의 보신/비밀주의)
- 자료 조작/파기, 허위, 위증 등 처벌 강화 필요
-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도록 명예훼손죄, 모욕죄 개정 필요
- → 공익적 문제제기 활성화

➤ < 참고 1> “학자의 공적 활동에 관한 윤리코드” 제정추진 취지설명

- 위원회의 취지를 경영학회 회원들께 알리고 위원회에 자전을 바라는 이메일

지난 3월 18일 학회 이사회에서 제안한 ‘학자의 공적 활동에 관한 윤리코드 제정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회원님들께 그 취지를 알려드리고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많은 회원님들의 도움과 참여를 바라고 위하여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공적 위원회에 많은 학자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 위원회에서는 학자의 자문, 의견제시, 심의, 의결 등을 통하여 국가예산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나아가 국가 사회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안들이 많이 결정됩니다. 또한 법정에서 전문가 증언 등은 판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의 효율성과 정의실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 활동에서 높은 **integrity**를 가진 학자의 학문적 연구결과에 근거한 의견제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고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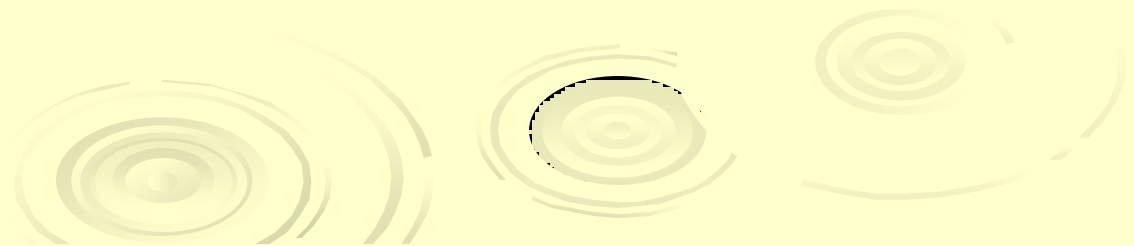
행동경제학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윤리나 신에 대한 생각/언급만 하는 것만으로도 윤리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영학회 차원에서 학자의 **integrity**를 증진하고, 학자의 공적활동이 보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필요하면 학자의 **integrity** 증진을 위한 사회 제도적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도 제안하려고 합니다.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일정은 자료수집, 연구 모임, 소규모 세미나 등을 통한 초안을 마련한 후에 중간발표 및 의견수렴 (10월경에 세미나/심포지엄)을 통하여, 학회 총회에서 최종발표 및 강령 채택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윤리강령 제정작업에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혹시 제정작업에 참여하실 분은 4월 15일(금) 오전 09시까지 사무국으로 답장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3.30. 윤리코드 제정 위원장 양채열 드림

< 참고: 윤리코드 제정 위원 >

- 강정애 (숙명여대 교수)
- 김승범 (CJ E&M / MezzoMedia)
- 김정원 (강원대 교수)
- 김진세 (전 관광공사)
- 이원준 (성균관대교수)



➤ <참고2-a> Statement on Professional Ethics, AAUP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

(<https://www.aaup.org/report/statement-professional-ethics>)

- 1. Professors, guided by a deep conviction of the worth and dignity of the advancement of knowledge, **recognize the special responsibilities placed upon them. Their primary responsibility to their subject is to seek and to state the truth as they see it.** To this end professors devote their energies to developing and improving their scholarly competence. They accept the obligation to exercise critical self-discipline and judgment in using, extending, and transmitting knowledge. They practice intellectual honesty. Although professors may follow subsidiary interests, these interests must never seriously hamper or compromise their freedom of inquiry.
- 2. As teachers, professors encourage the free pursuit of learning in their students. They hold before them the best scholarly and ethical standards of their discipline. Professors demonstrate respect for students as individuals and adhere to their proper roles as intellectual guides and counselors. Professors make every reasonable effort to foster honest academic conduct and to ensure that their evaluations of students reflect each student's true merit. They respect the confidential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 They avoid any exploitation, harassment, or discriminatory treatment of students. They acknowledge significant academic or scholarly assistance from them. They protect their academic freedom.
- 3. As colleagues, professors have obligations that derive from common membership in the community of scholars. Professors do not discriminate against or harass colleagues. They respect and defend the free inquiry of associates, even when it leads to findings and conclusions that differ from their own. Professors acknowledge academic debt and strive to be objective in their professional judgment of colleagues. Professors accept their share of faculty responsibilities for the governance of their institution.
- 4. As members of an academic institution, professors seek above all to be effective teachers and scholars. Although professors observe the stated regulations of the institution, provided the regulations do not contravene academic freedom, they maintain their right to criticize and seek revision. Professors give due regard to their paramount responsibilities within their institution in determining the amount and character of work done outside it. When considering the interruption or termination of their service, professors recognize the effect of their decision upon the program of the institution and give due notice of their intentions.
- 5. As members of their community, professors hav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other citizens. Professors measure the urgency of these obligations in the light of their responsibilities to their subject, to their students, to their profession, and to their institution. When they speak or act as private persons, they avoid creating the impression of speaking or acting for their college or university. As citizens engaged in a profession that depends upon freedom for its health and integrity, professors have a particular obligation to promote conditions of free inquiry and to further public understanding of academic freed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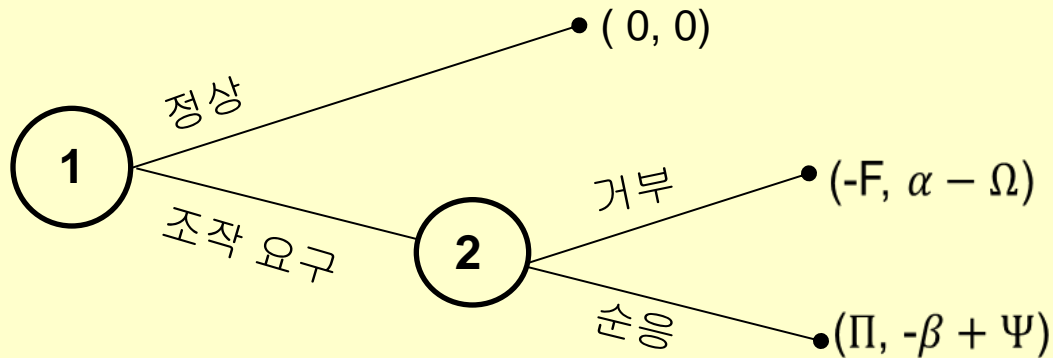
- <참고2-b> THE MBA OATH (<http://mbaoath.org/about/the-mba-oath/>)
- As a business leader I recognize my role in society.
- My purpose is to lead people and manage resources to create value that no single individual can create alone.
- My decisions affect the well-being of individuals inside and outside my enterprise, today and tomorrow.
- Therefore, I promise that:
- I will manage my enterprise with loyalty and care, and will not advance my personal interests at the expense of my enterprise or society.
 - I will understand and uphold, in letter and spirit, the laws and contracts governing my conduct and that of my enterprise.
 - I will refrain from corruption, unfair competition, or business practices harmful to society.
 - I will protect the human rights and dignity of all people affected by my enterprise, and I will oppose discrimination and exploitation.
 - I will protect the right of future generations to advance their standard of living and enjoy a healthy planet.
 - I will report the performance and risks of my enterprise accurately and honestly.
 - I will invest in developing myself and others, helping the management profession continue to advance and create sustainable and inclusive prosperity.
 - In exercising my professional duties according to these principles, I recognize that my behavior must set an example of integrity, eliciting trust and esteem from those I serve. I will remain accountable to my peers and to society for my actions and for upholding these standards.
 - This oath I make freely, and upon my honor.

* 게임 모형을 활용한 분석: “학자 integrity 게임”

- 게임이론적 관점에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도 그 게임에서 하나의 균형이지만 “나쁜” 균형임.
- “법 지키는 사람은 손해”라는 말은 법을 지키는 사회적으로 좋은 행동이 그 행위 당사자에게 손해가 되며, 대신에 불법이 이익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함
 - 현행 법제도가 유인합치성(incentive compatibility)을 결여함을 의미.
- 게임의 균형은 **self-enforcing**
 - 경기자들이 자기 최선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결과
- 사회 개선 → 게임 균형의 변경
 - “나쁜” 균형 → “좋은” 균형
 -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좋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게임의 룰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현재의 “나쁜 균형”을 “좋은 균형”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

학자 integrity 게임 -1

- 경기자 1: 연구 발주자 (기업, 정부/지자체 등)
- 경기자 2: 연구자



➤ 변수 설명(모든 변수는 양수임)

- α : 정의로운 양심, 불의에 거부/저항한 것에 대한 뿌듯함, 금지
- β : 부끄러운 양심, 불의에 굴복/타협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창피.
- Π : 조작에 성공하여 확보하는 1의 수익
- Ψ : 특혜, 순응함으로써 혜택으로 부여받는 2의 이익 (예. 사업권, 연구지원선정, 각종 지원사업 선정, 국고보조금 등)
- Ω : 보복: 거부함으로써 보복당하는 2의 불이익 (예. 세무조사, 인사조치, 사업탈락)
- F : 사회 공적 시스템에서 적발시 조작요구에 가해지는 기대처벌 비용 ($F = p \times f$)

학자 integrity 게임 -2

➤ 개선방안

- $\rightarrow \alpha + \beta > \Psi + \Omega$

➤ 윤리 증진: 윤리교육, 홍보, 문화운동 등

- α, β 수준을 올림 (irrational type?)

➤ 공적인 처벌 시스템(사법시스템) 강화

- F 수준을 높임. ($F = p \times f$, 적발확률, 처벌 강도)

➤ 사적 편익의 향유와 특혜부여가 어렵도록 사회시스템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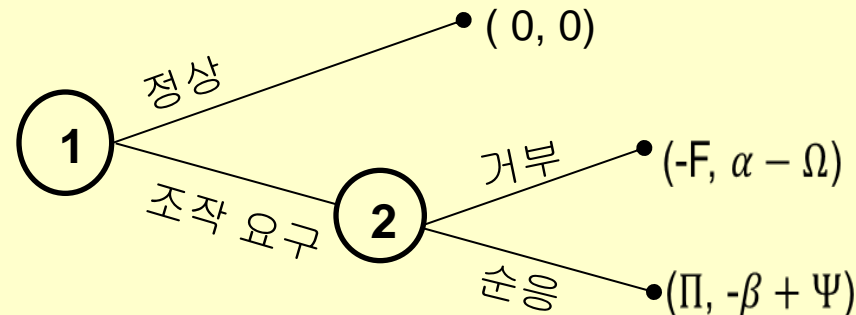
- Π, Ψ 방지 방안 강구
- 공적기구가 사적 이익을 고려하여 변질되지 않는 강건한 의사결정구조 확보
- Accountability 강화 방안

➤ 사적 보복이 어렵도록 사회 시스템 보강 (Ω 감소; 강화이론에서 ‘소거’)

- 공무원의 기본권 보호장치 강화 필요
- 공적 검토를 제대로 한 훌륭한 공무원을 처벌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허약한 구조는 문제
- 성과급제의 악용 가능성 문제 (기본급 축소되고 Ω 수준 높아지는 효과)
- 사후에라도 보복받은 공무원을 보상하는 방안을 제도화 (내부고발자 보호와 유사)

➤ 특혜/보복 : 강화이론에서의 상/벌은 명시적, 소극적 강화/소거는 간접적

- 강의 사례금, 사외이사, 용역, 공기업 엽관, 문화예술지원, 시민단체지원 — 국고보조금.
- 우수도서/교육부지원 **사업에 미선정** ... 직접적 방식에서 간접적 방식으로



* 금강산 댐 사건

(EBS 지식채널)

-사업타당성분석 연구에 곡학아세?

- 관료의 대리인 문제와 연구자의 사익추구가 결합하면 이론적으로 가능.

- “Tit For Tat”전략

- 좋은 균형을 위해서는 허위 처벌 필요

<필요한 것>

-연구자 개인차원의 반성?

-연구자 소속 기관의 내부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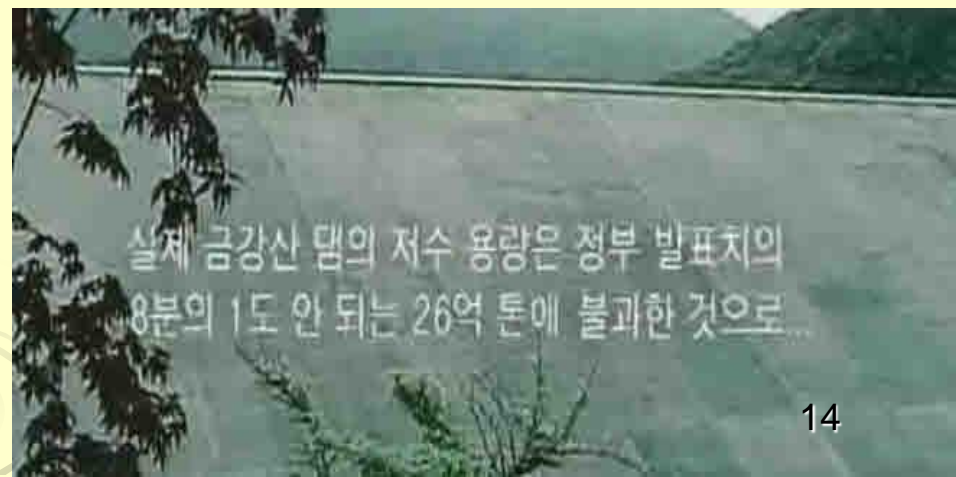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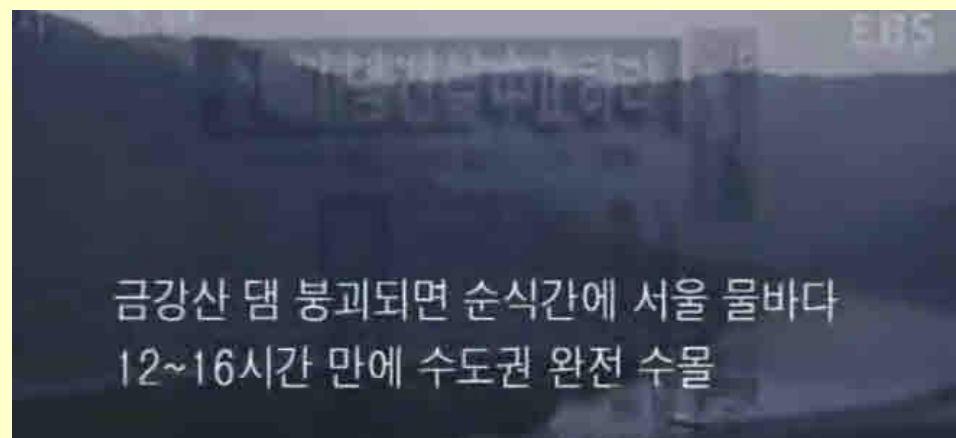
-학계의 자정 능력

-허위를 쉽게 파악 가능한 시스템

- 상시적으로 책임규명 가능한 형태로 자료 공개 (법제도 개선, 정보시스템)

-NGO와 언론의 역할

- Naming and Shaming



➤ 학자로서의 공적 활동이 우리 사회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자각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모든 공적 활동에서 허위를 배척하고 진리를 추구한다.
-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추구한다.
- 연구 수행이나 결과의 발표 등에서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도록 하고, 또한 공익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여 학계에서 학문적 견해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 학문과 탐구의 자유를 위한 사회적 조건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 우리 모두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조건을 탐구하고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다.